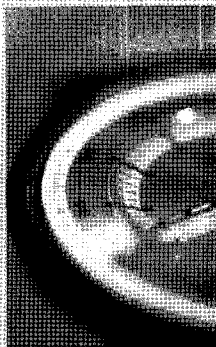


특집 www.kcca.or.kr



지경부·제지·폐지 등 관련업계 정책간담회 개최

국내 폐지 관리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지관련정책간담회가 지난 6월 9일 포스코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지식경제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차관보)주재로 골판지포장조합 오진수 이사장을 비롯해 제지연합회 이상문 회장, 제지조합 권혁홍 이사장, 아세이제지 이재홍 사장, 신문협회 이상연 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폐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만난 자리였다.

조석 실장은 "제지 원료의 안정적 관리는 최종수요처인 신문업계나 골판지포장업계의 원자재 가격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확실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폐지 집하장 구축 및 유통관리기구 설치와 자원의 무분별한 해외 유출을 제어할 수 있는 수출 규제 제도 마련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제지업계가 하는 일을 지원할 뿐이지, 성사시킬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여업계의 능동적인 역할과 추진만이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제지와 폐지업계가 상호 조율하여 지경부와 협력 양해각서 조인할 수 있기를 제안하였다. 제지업계를 대표한 이상문 회장과 권혁홍 이사장은 "정부에서 제시한 구체적 지원책을 검토해 보니 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것이라 평가하고, 업계 스스로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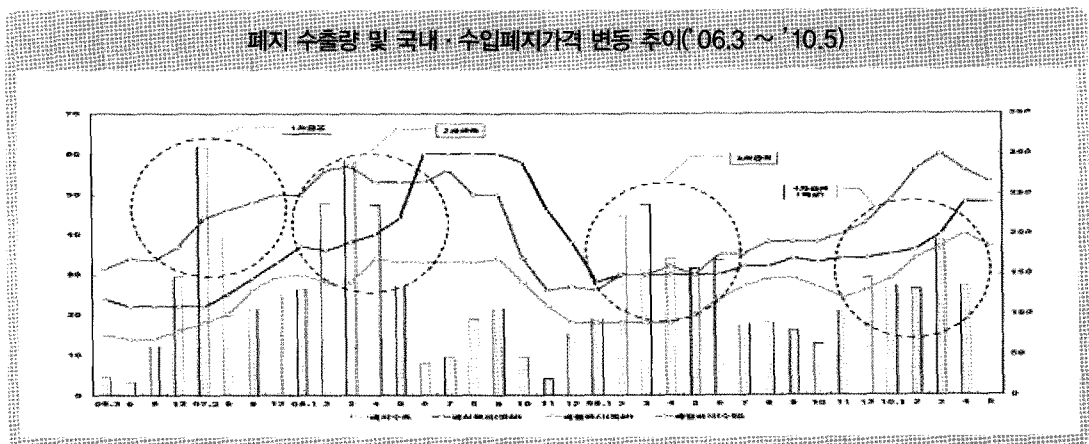
오진수 골판지포장조합 이사장은 "금년 3월 발생한 원지공급 파동과 가격 폭등 현상은 폐지와 골심지의 수출이 급증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골심지 수출 기업이 수출한 양 만큼 폐지를 수입한다면 이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제도적 방안도 이 지점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 말미에 제지 · 폐지업계는 정부 구상안(별지 국내 폐지관리시스템 선진화 방안 참조)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내 폐지 관리시스템 선진화 방안

1. 추진 배경

□ 후진적 폐지유통 관행과 지속적인 廢紙(폐골판지, 폐신문지) 수출 증가로 주기적인 국내 폐지 수급차질 및 급격한 가격변동 발생

* 폐지 수급 현황(과부족, 천톤) : '07) 430 → '08) 197 → '09) 285



○ 민간 폐지유통 관리기구인 (주)KP&R(Korea Paper & Recycling)이 역할 한계로 해산('09.11.25)함에 따라 자율적인 폐지유통 관리기능도 상실

* '07.12월 설립, 자본금 17.4억원, 제지 10개업체 및 폐지 82개업체가 참여

□ 관리기능 상실로 인해 최근 작년말 寒波로 인한 폐지 수거량 감소와 맞물려 국내폐지가격 급상승

* 국내폐지가격 현황(폐골판지 · 폐신문지, 천원/톤) : '09.1) 90 · 140 → 6) 120 · 150 → 12) 130 · 170 → '10.2) 170 · 180 → 3) 185 · 200 → 4) 200 · 240 → 5p) 185 · 240

○ 이에 따라, 폐지를 원료로 하는 골판지 및 신문용지가격도 인상되어 포장재 제조 및 신문업계의 원가부담가중

* 골판지 · 신문용지가격 현황(천원/톤) : '09.1) 350 · 760 → '09.3) 300 · 710 → 7) 300 · 675 → '10.2) 355 · 675 → 3) 460 · 675 → 4) 460 · 675 → 5p) 460 · 715

폐지의 안정적 수급관리 기반마련과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민·官 공동 폐지수급·유통관리시스템」구축을 추진

2. 현황 및 문제점

□ (폐지수급)(시장규모 : 약 2.1조원) '09년 공급(국산+수입산, 폐지 회수율 : 89.9%) 897만톤, 수요(내수+수출) 926만톤으로 28.5만톤 정도 과부족

* 과부족량은 지속적인 폐지 수출 및 수요 증가로 연평균 26.6% 증가 추세

○ 수요는 경제성장과 농산물 등의 포장 확대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 공급도 매년 증가하여 총수요의 12.1% 정도 수입에 의존

년 도	연도별 폐지 수급 현황('05 ~ '10.1 ~ 4월)						단위 : 천톤, %	
	총공급(A)			총수요(B)			차이(C=A-B)	
	국산	수입	소계	내수	수출	소계	물량	비율
'05년	7,086	1,350	8,436	8,501	46	8,547	-111	1.3
'06년	7,455	1,211	8,666	8,668	124	8,792	-126	1.4
'07년	7,998	1,182	9,180	9,147	463	9,610	-430	4.5
'08년	7,902	1,307	9,209	9,113	293	9,406	-197	2.1
'09년	7,851	1,122	8,973	8,934	324	9,258	-285	3.0
10.1~4월	2,702	449	3,151	3,103	119	3,222	-7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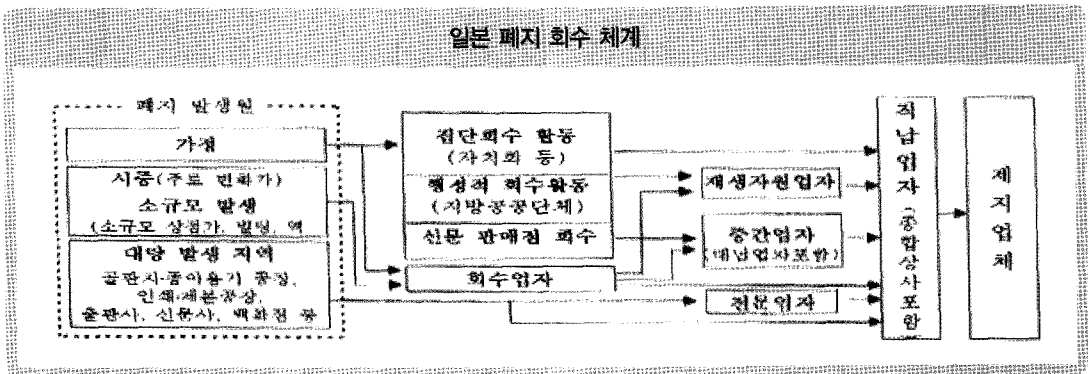
출처)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제지산업 통계연보” 2009,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정보망(KOTIS)

- (유통구조) 다단계 고비용 구조로서 중소 수집업체들이 난립한 상태
 - * 유통체계 :배출원→수집자→고물상→중간상→압축장→제지업체(주택, 상가, 아파트, 사무실 등)(개인, 소규모 고물상)(대형고물상)
 - 수집업체는 약 10,000개업체로 중소기업체가 9,600여개로 대부분 차지
 - 이로 인해, 고정 거래선이 없고 당일 가격조건에 따라 납품처 결정 및 수시 물량조절로 유통질서 문란 및 폐지 안정적 공급을 저해

- (품질관리)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 미비*로 주관적인 검수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제지·폐지업계에 갈등 빈번
 - * 품질을 고려하지않고 단순무게비율로 가격을 책정함에 따라 부당加水행위 만연으로 종이 제품회수율 하락(70% 이하)
 - 또한, 실시간 수급관리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않아 국내 대비 국제가격이 높은 경우의 폐지 수출 증가에 대한 실시간 대처가 어려움

3.외국의 사례

- (폐지수급)(시장규모 : 약 2.1조원) '09년 공급(국산+수입산, 폐지 회수율 : 89.9%) 897만톤, 수요(내수+수출) 926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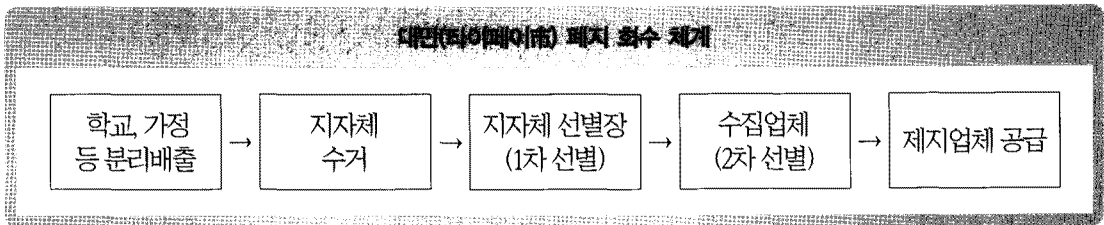
- 폐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고지재생촉진센터’를 설립·운영중(’74년), 순 회수과정에 비가림시설 설치 및 상표제를 도입하여 품질을 제고
 - * 폐신문지, 폐골판지, 폐잡지, 폐사무용지 등 5종의 품질기준 제정·운영중

〈민·관 공동「재」고지재생촉진센터」개요〉

- 설립일/회원업체수(603개업체, '09년) : '74 3 제지업체 39, 폐지업체 561, 기타 3
- 회원업체 : 왕지제지, 일본제지, 石川 material, 明和제지원료, 大和紙料 등
- 추진사업 : 품질안정대책사업, 홍보 · 선전사업, 조사 · 연구사업, 구조개선사업 등
- 운영예산(총 9.4억엔) : 회원업체 회비, 재산운용 수입, 정부 보조금 등

□ (대만) 회수단계에서 지자체의 회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요일별 분리수거를 시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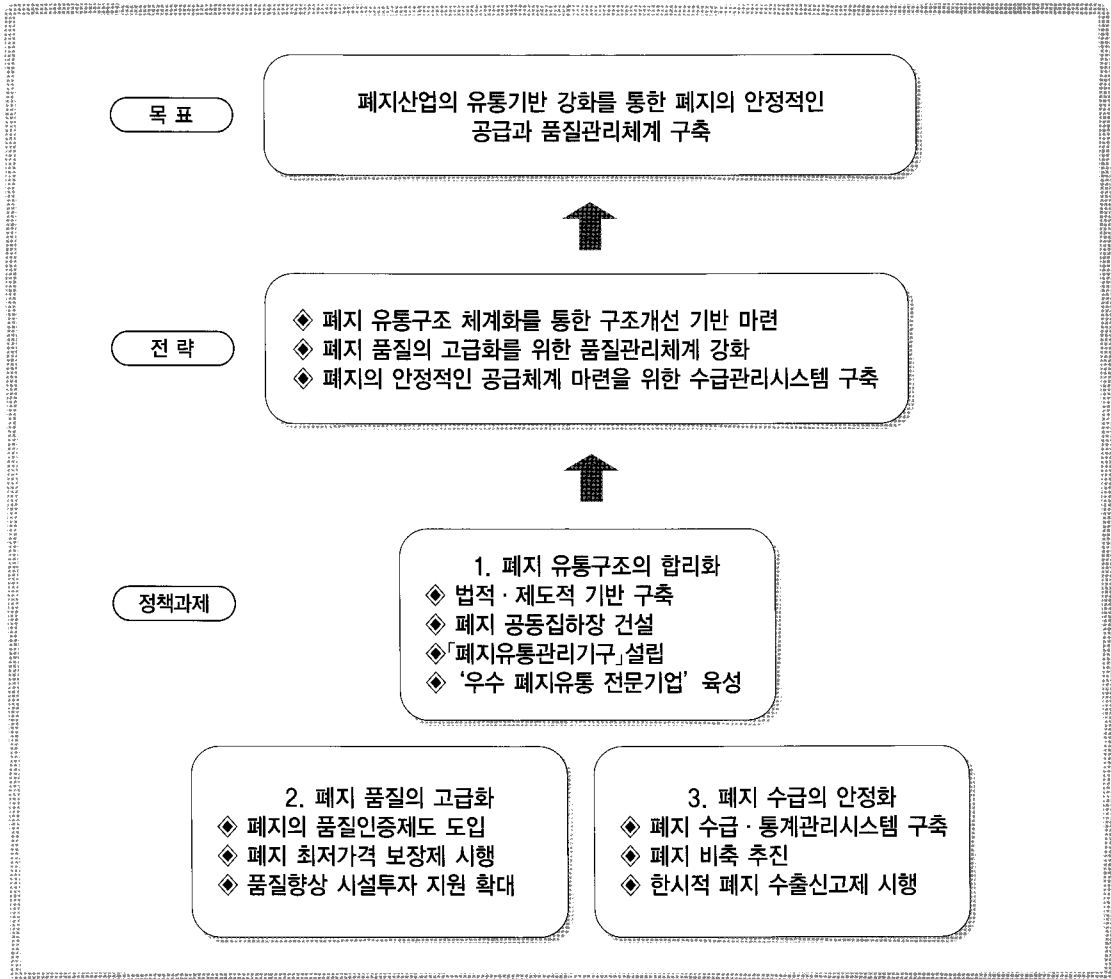
* '08년 폐지 수급실적 : 소비 3,549천톤, 수입 781천톤, 수출 15천톤



○ 국제 폐지 수급 악화로 국내폐지 및 산업용지의 가격안정과 수요 충족을 위해 '10.4월부터 3개월간 폐지 수출쿼터제를 시행중

* '07.8월부터 폐지수출을 금지하였고 '08.10월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폐지 수요감소로 수출쿼터제로 변경하여 '09.8월 폐지

4. 추진 전략



5. 세부 선진화 방안

폐지 유통구조의 합리화

① (법적·제도적 혁신기반 구축) 폐지재활용 수집업체의 신고업체로 전환, 폐골판지 회수율 제고 및 폐지 공동집하장 설립 등 관계법령* 개정 추진

*「폐기물 관리법」(환경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

② (폐지 공동집하장 건설) 각 지역 권역별로 폐지 수집 · 압축업체를 집결시켜 폐지 입고부터 출고까지 관리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건설

* 집하장 규모 : 최소 30,000m²이상, 설립지역 : 지역권역별 매립지 또는 그린벨트 지역

○ 전국 폐지 사용량의 30%이상을 차지(16만톤/월이상)하는 수도권 8개지역부터 우선 추진, 추후 충청, 영남 및 호남권 등으로 확대

* 중진공 '협동화(공동화) 사업자금' ('10년 120억원)을 활용하여 집하장 부지 확보 및 시설 건립자금을 저리 융자형태(5년거치 10년상환)로 지원(업체도 일부 부담)

③ (폐지유통관리기구 설립) 제지 · 폐지 25개업체 및 2개단체가 참여하는 우리부 인가 재단법인 설립 추진

○ 약 20억원(잠정) 업체에서 출연, 수급 · 품질관리 전담조직(7명) 구성 · 운영

○ 우리부,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폐지 수급 · 품질인증관리위원회' 를 동 관리기구에 설치 · 운영하여 폐지 수급 · 품질을 조정 · 관리

④ (우수 폐지유통전문기업 육성) 우수 품질관리업체를 선발하여 전문기업으로 인증하여 납품가격 우대, 시설자금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폐지 품질의 고급화

① (품질인증제도 도입) 폐지 품질인증 · 등급기준(우수재활용제품 인증규격 : GR규격)을 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폐지에 대해 인증등급 부여

* 폐지 인증 · 등급기준별로 색깔이 다른 인증라벨을 압축폐지에 부착하여 공급

○ 인증제도 운영은 '기술표준원' 에서 담당, 사후관리는 '폐지유통관리기구' 에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추진(10월부터 시범인증 실시)

② (최저 수집 · 공급가격 보장제 시행) 공동집하장에서 입 · 출고 폐지에 대해 폐지가격 및 수급 변동에 상관없이 최저 수집 · 공급가격을 보장

○ 품질인증 폐지는 등급별로 구매가격을 차등화(일반폐지보다 높은 구매가격 책정) 및 우선 구매, 시행 주관은 '폐지유통관리기구' 에서 담당

③ (품질향상 시설투자 지원) 폐지 품질 제고를 위한 비가림시설 및 선별시설 등 시설 현대화 투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 재활용산업육성자금('10년 650억원) 등을 활용하여 시설 투자시 자금 지원 추진

폐지 수급의 안정화

① (수급 ·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제지 · 폐지업체 · 관리기구간 폐지 입 · 출고 · 재고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한 온라인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 * 지식경제부의 ‘대·중소 IT상생기반구축사업’ 예산과 출연금을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비용 총당
- 입·출고 폐지에 바코드 테크를 부착하여 품질인증정보, 입·출고 및 유통단계 등에 대한 제품이력정보 등을 관리
- ② (폐지 비축) 공동집하장과 연계하여 ‘폐지유통관리기구’ 주도로 필요시 폐지 종류별 비축 추진
 - 송도매립지의 경우*는(약 19.8백만㎡)에 제지업체(수도권 소재) 월 폐지소요량의 10%인 3만톤 규모로 추진하되, 소요비용은 제지업체가 부담
 - * 인천 서구 백석동 일원으로 추후에 권역별로는 공동 집하장 확대계획과 병행 추진
- ③ (한시적 ‘폐지 수출신고제’ 시행) 폐지 수출로 인한 급격한 폐지가격 및 공급차질 발생시 관련협회(조합)을 통한 ‘폐지 수출신고제’ 도입
 - * 철스크랩에 대한 수급 파동시 동 제품을 수출승인품목으로 지정하여 '04.3~9월기간 동안 관련협회의 신고를 거쳐 수출토록 한 바 있음

6. 향후 추진 일정

추진과제	주관기관(협조 기관)	추진일정
1. 폐지 유통구조의 합리화		
①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환경부, 국토부(지경부)	'10년 완료
② 폐지 공동 집하장 건설	지경부(중기청, 지자체, 조합)	'12년 완료
③ 폐지유통관리기구 설립	지경부	'10년 완료
④ 우수 폐지유통 전문기업 인증·육성	지경부(중기청)	'10년 완료
2. 폐지 품질의 고급화		
① 폐지의 품질인증제도 도입	지경부(기표원)	'10년 완료
② 폐지 최저 수집·공급가격 보장제 시행	지경부(폐지유통관리기구)	'12년 완료
③ 품질향상 시설투자 지원 확대	지경부(환경부, 중기청)	'11년 완료
3. 폐지 수급의 안정화		
① 폐지 수급·통계관리시스템 구축	지경부(폐지유통관리기구)	'11년 완료
② 비상 수급상황을 고려한 폐지 비축	지경부(폐지유통관리기구)	'12년 완료
③ 한시적 폐지 수출신고제 시행	지경부(폐지유통관리기구, 조합)	'10년 완료